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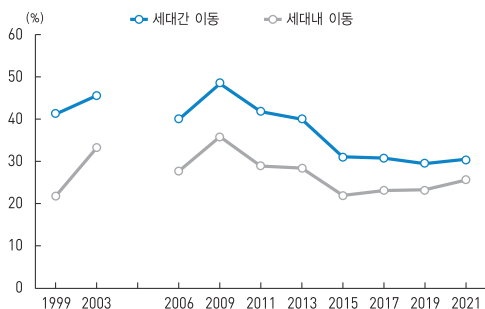
1945년 ~ 1960년대	1970년대 ~ 1980년대	1990년대 ~ 2000년대	2010년대 ~ 현재
전쟁 후유증 이념갈등	산업화 민주화 노사갈등	양극화 계층갈등	웰빙 관심 갈등 다변화

[시대별 주요 특징]

- (1945년~1960년대) 해방 후 1960년대까지 한국은 전후 복구에 주력했다. 1950년대에는 광범한 인구이동, 이념적 갈등 후유증으로 사회적 혼란이 심각했다. 4·19 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후 다시 5·16 군사정변으로 군부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와 사회적 근대화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 (1970년대~198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늘어난 노동자층의 불만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지식인, 학생의 불만은 1980년과 1987년 두 차례의 민주화 운동으로 분출되었다.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매일 100여 건이 넘는 시위가 있었다. 또한 어려운 생활 조건과 취약한 권리보장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 표출이 1987년 3,749건, 1988년 1,873건의 파업으로 나타났다.
- (1990년대~2000년대) 민주화로 자유를 누렸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대로 불평등 수준이 높아져 1995년 시장소득 기준 0.255까지 낮아졌던 지니계수가 2006년 0.3을 넘고 2009년 0.32까지 높아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투자성향이 커지고 경쟁이 강조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이 심해졌다.
- (2010년대~현재) 2018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하며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의 심화로 청년층 취업 문제를 비롯한 세대갈등이 부각되었고, 청년층 내 젠더갈등도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이 과거의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에 더해 젠더갈등, 세대갈등, 환경갈등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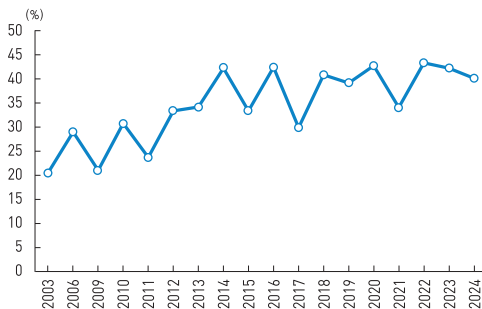
[주요 지표]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포용)



주: 출처, 정의 등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삶에 만족하는 비율





사회통합은 개념적으로 사회경제적 격차와 갈등이 심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포용하며, 개인과 사회, 개인과 개인 간 연대가 돈독하고,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결과 사회가 분열 혹은 해체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한준 외, 2017).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념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한 냉전 하에서 산업화를 진행하며 권위주의 정치가 지속되어 자유로운 시민사회는 위축되었고, 사회통합의 문제는 경제성장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렸다.

경제성장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민주화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된 이후 사회통합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해졌다. 다양성 증가와 권리의식 상승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문제가 되고, 개인주의화로 사회적 연대가 중요해졌으며, 무질서와 갈등 없이 공존하기 위해 시민적 책임과 의무 또한 강조되었다.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사회조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사회통합의 핵심 내용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연대, 시민성이며, 이 글도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본다.

포용(inclusion)은 사회 성원을 배제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서 구성원 모두가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취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대(cohesion)

는 사회 구성원들이 선의를 갖고 사회에 참여하며, 서로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통해 협력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성(civility)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적 영역을 신뢰하며 효능감 있게 참여해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것이다.

주관적 웰빙은 200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후, OECD)를 중심으로 국제기구들에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사회통계에 본격 포함되었다. 2010년대 초에 측정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OECD가 권고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사회지표에 독자적 영역으로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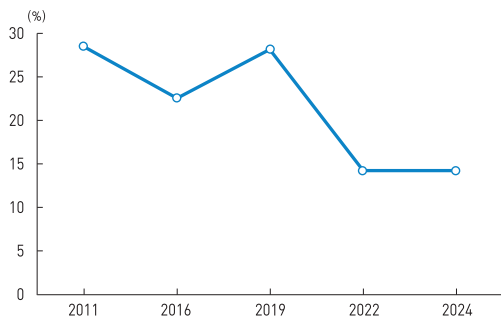
사회통합과 포용

2000년대 이후 양극화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에서도 언론이나 정책에서 포용의 가치가 주목받게 되었다.

포용적 사회가 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은 개인 배경, 특성에 따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다. 한국은 1894년에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쳐 1960~1970년대까지도 일상생활에 신분 차별이 남아 있었고, 1970년대 공장에서는 여공들에 대한 성 차별이 심각했다.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조사는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식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이루어졌다. [그림 XI-1]을 보면, 한국에서 어떤 형태든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대에 20%를 넘는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림 XI-1] 차별 경험 비율(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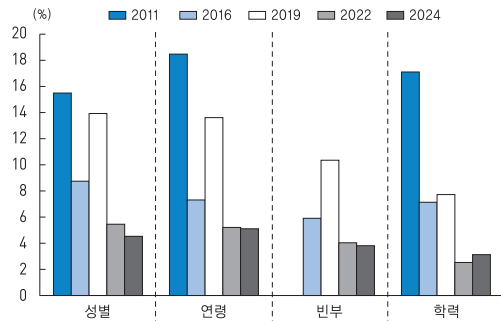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중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2011년, 2016년 조사는 '지난 3년 동안' 차별 경험, 2019~2024년 조사는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을 조사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 2011, 2016, 「인권인식 실태조사」, 각 연도.

차별을 겪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나 배경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가? [그림 XI-2]는 차별을 당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의 비율을 보여준다. 2019년에 차별 경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성별이었고, 그다음은 연령, 경제적 지위, 학력/학벌의 순이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 비율은 2019년에 14% 가까이 되었다가, 2020년대 들어 5% 수준으로 낮아졌다.

차별이 줄어들고 포용이 늘어나려면 사람들의 관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빠

[그림 XI-2] 차별 이유별 경험 비율, (2011~2024)



주: 1)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2011년, 2016년 조사는 '지난 3년 동안' 차별 경험, 2019~2024년 조사는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을 조사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 2011, 2016, 「인권인식 실태조사」, 각 연도.

르게 변화하는 한국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관용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나와 다르거나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용적인지를 측정하는데, 여러 소수자 집단을 나와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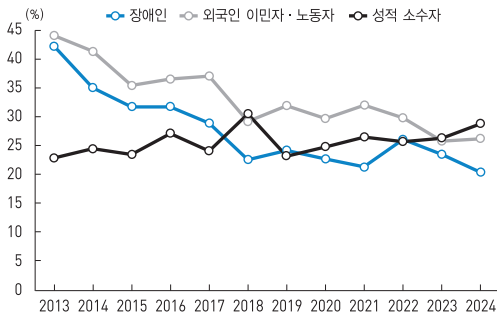
[그림 XI-3]은 장애인, 외국인 이민자 혹은 노동자, 성적 소수자를 이웃 혹은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2013년 각각 42.2%와 44.0%에서 2024년에 각각 20.4%와 26.2% 낮아졌다. 한편 성적 소수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동 기간에 22.9%에서 28.8%로 높아졌다.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높으며 2013년 28.2%에서 2024년 40.5%로 높아졌다. 장애인을 친구로 받아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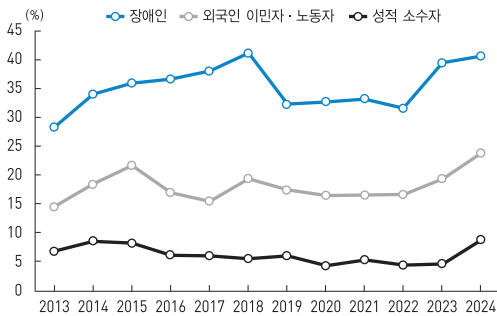
수 있다는 비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회복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대상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로, 2013년 14.5%에서 2024년 23.8%로 높아졌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2013년 6.8%에서 2023년 4.6%로 낮아졌다가 2024년에 다시 8.8%로 높아졌다.

[그림 XI-3] 소수자에 대한 관용, 2013-2024

1) 이웃



2) 친구



주: 1) 전체 응답자 중 해당 특성의 사람을 이웃이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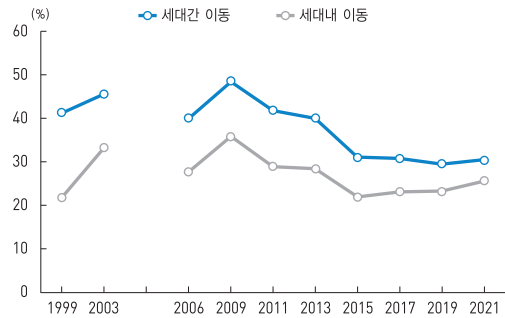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포용은 불평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

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동 가능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XI-4]는 노력을 통해 사회이동, 즉 계층 상승을 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2003년 이후 척도가 바뀌어 그 이전의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09년 세대 간 이동의 경우 48.4%, 세대 내 이동의 경우 35.7%까지 높아졌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2015년까지 각각 30.9%와 21.8%로 떨어졌다. 이후 세대 간 이동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세대 내 이동 인식은 2015년 21.8%에서 2024년 27.3%로 상승했다.

[그림 XI-4]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 2013-2023



주: 1) 전체 응답자 중 노력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2) 1999년과 2003년은 5점 척도, 이후는 4점 척도로 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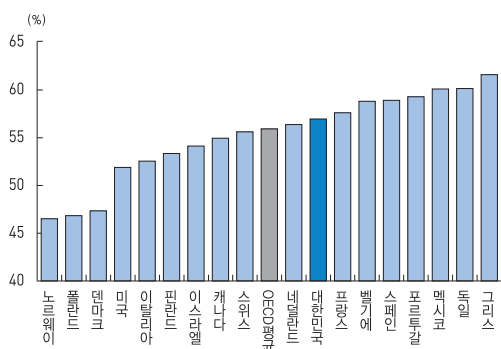
3) 연령 기준은 2009년: 15세 이상, 2011~2015년: 13세 이상, 2017년~: 19세 이상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이동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포용 측면에서 사회통합이 여전히 잘 안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만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XI-5]는 OECD에서 2020년에 실시한 국제조사에서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빈곤층 출신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국가별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한국은 OECD 평균인 55.9%보다 조금 높은 56.9%가 빈곤층의 세대 간 이동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노르웨이, 폴란드,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림 XI-5]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의 국제비교, 1990년대 초, 2020년대 초



주: 1) 전체 응답자 중 소득 하위 10%의 빈곤층 출신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빈곤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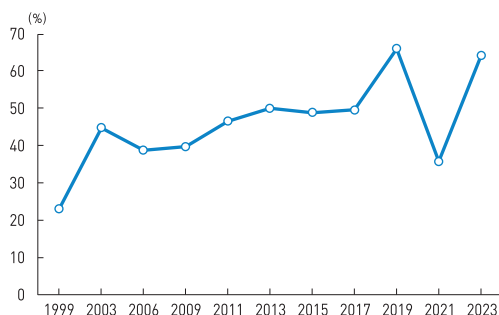
출처: OECD, *Does Inequality Matter? How People Perceive Economic Disparities and Social Mobility*, 2021년도 분석 자료는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0*.

사회통합과 연대

‘자발적 결사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토크빌의 말처럼 다양한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높이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든다.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를 묻는 문항이 사회조사

에 포함된 1999년 이후 사회단체 참여 비율을 보여주는 [그림 XI-6]에 따르면, 사회단체 참여 비율은 1999년 23.1%에서 2023년 64.2%로 40%p 넘게 높아졌다. 2021년에 일시적으로 사회단체 참여가 35.8%까지 낮아졌던 것은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XI-6] 사회단체 참여 비율, 1999-2023



주: 1)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하나 이상의 사회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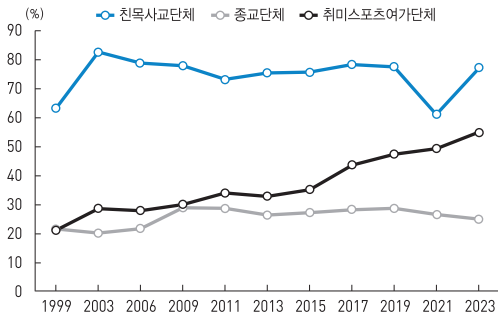
2)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I-7]은 단체 참여자들 중에서 참여율이 높은 단체 종류별로 참여율 변화를 보여준다.

친목사교단체의 경우 조사 초기(1999년)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7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경우 2000년대 초반 20% 부근에서 출발해 2009년에 28.9%까지 오르지만 이후 2023년에 25.0%까지 낮아진다. 주목할 것은 취미·스포츠·여가단체로 1999년 21.2%에서 2023년 54.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단체하

는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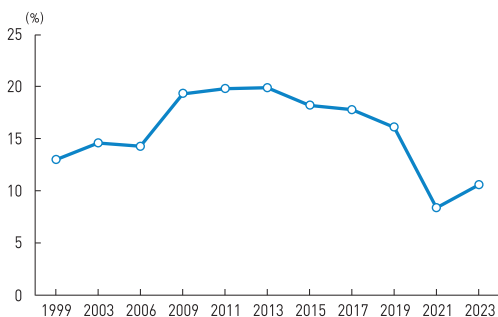
[그림 XI-7] 사회단체 종류별 참여 비율, 1999-2023



주: 1) 사회단체 참여 응답자 중 해당 사회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단체 참여와 함께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도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XI-8]은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그림 XI-8] 자원봉사 참여 비율, 199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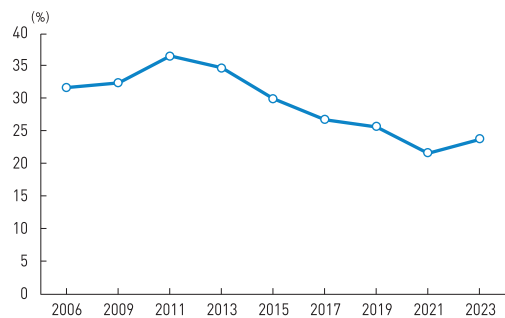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1999년 13.0%에서 2013년 19.9%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빠르게 떨어져 2023년에 10.6%가 된다. 2019년 이후의 급격한 감소세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줄어든 이유도 있다. 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자원봉사 참여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림 XI-9]는 기부활동에 참여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부활동 참여 비율은 2006년 31.6%에서 2011년 36.4%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3.7%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연대의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XI-9] 기부 참여 비율, 200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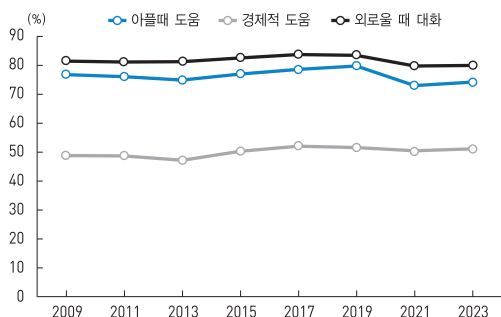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200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2000년대 들어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가족관계가 약해지며, 사회적 관계가 점점 파편화되면서 사회적 지지의 약화, 즉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림 XI-10]은 몸이 아플 때,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과 외로울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XI-10] 사회적 지지를 받는 비율, 200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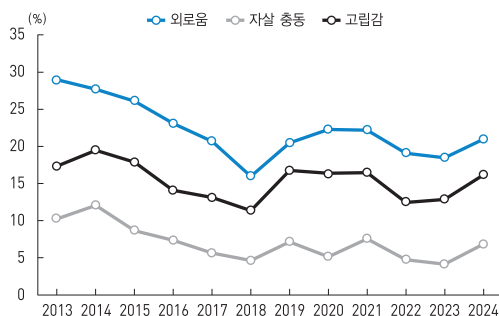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중 각각의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200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아플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2011년부터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외로울 때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이 수치는 80% 부근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2019년에 80% 가까이 올라갔다 2023년에 74%로 낮아진다. 한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2013년까지 50%에 못 미치다가 이후 약간 상승하여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사회적 지지가 취약하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림 XI-11]은 외로움과 자살 충동, 고립감 등의 변화를 보여준다.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2013년 28.9%에서 2018년 16.0%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4년

에 21.0%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비율도 2013년 10.3%에서 2020년 5.2%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 6.9%로 다시 상승했다. 아무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2014년 19.5%에서 2018년 11.4%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서 2024년에는 16.2%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 관련 지표들은 2018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후에는 뚜렷한 패턴 없이 증감을 반복한다.

[그림 XI-11]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비율, 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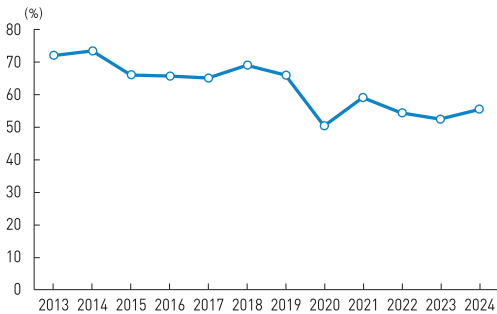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중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 아무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 혹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사회적 연대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혈연이나 지연 같은 폐쇄적인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뭉치는 연고주의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사적 신뢰가 높은 반면 공적 신뢰는 낮다(이재열, 2003). 그 결과 신뢰나 호의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공적 신뢰를 일반화된 신뢰로 해석한다면, 일반적

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공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그림 XI-12]에 나타난 일반화된 신뢰의 변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비율은 2013년 72.2%에서 2024년 55.6%까지 하락세를 보인다. 2020년에는 50.6%까지 낮아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XI-12] 일반화된 신뢰의 비율, 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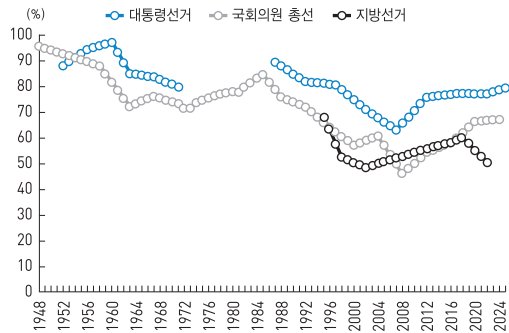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중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혹은 '약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사회통합과 시민성

높은 시민성은 민주주의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참여와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표현하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림 XI-13]은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및 지방선거의 투표율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XI-13] 각종 선거 투표율, 1948-2025



주: 1) 유권자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대통령 선출이 간선제로 이루어진 유신 및 5공 하국 시기를 제외한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변화를 살펴보면, 해방 후와 4·19 직후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1960년 선거에서 97%라는 매우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이후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89.2%까지 올라간다. 이후 다시 낮아져 2007년에 63.0%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후 계속 높아져서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79.4%의 투표율을 보였다.

국회의원 선거(총선) 역시 해방 후 첫 선거인 1948년 제헌의회 선거가 95.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이후 1963년에 72.1%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져 1985년에 84.6%까지 높아진다. 이후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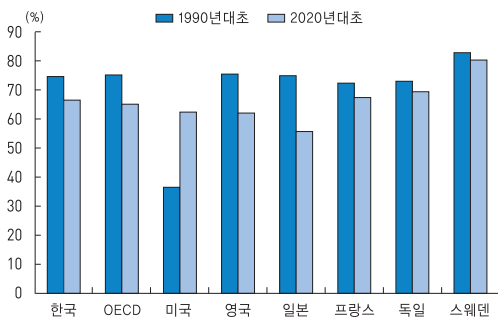
46.1%까지 낮아졌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67.0%가 되었다.

지방선거의 경우 처음 시작된 해인 1995년에 투표율이 68.4%로 가장 높았다. 이후 2002년에 48.9%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60.2%에 이른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낮아져서 50.9%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10년 무렵까지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하강세를 보이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투표율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대통령 선거가 가장 높고, 다음이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순이다. 대통령제에서 유권자들이 각 선거에 부여하는 관심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의 투표율은 국제비교적 측면에서 어떤 상태인가? [그림 XI-14]는 OECD 주요 국가들의 1990년대 초, 2020년대 초 투표율(총선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총선 투표율은 2020년대 초 기준 66.5%로 OECD 평균 65.1%와 비슷하

[그림 XI-14]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의 국제비교, 1990년대 초, 2020년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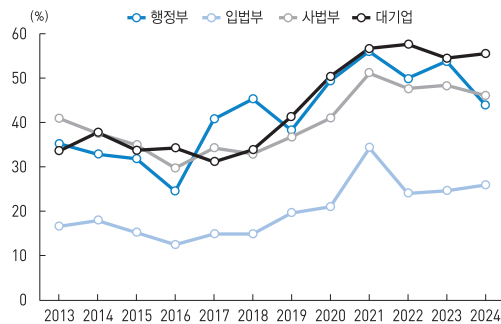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24*

며,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은 62%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고, 일본은 55.8%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1990년대 초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졌다. 미국만 1990년대 초 투표율이 36.5%로 매우 낮았다가 2020년대 초에 62.4%로 상승했다.

[그림 XI-15]는 주요 제도와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이 사회제도나 기관의 운영에 협력하도록 할 뿐 아니라 냉소적 태도를 줄여서 이들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XI-15] 주요 제도 기관에 대한 신뢰, 2013-2024



주: 1) 전체 응답자 중 중앙정부 부처, 국회, 법원 대기업에 대해 4점 척도로 묻은 것에 대해 '매우 믿는다' 혹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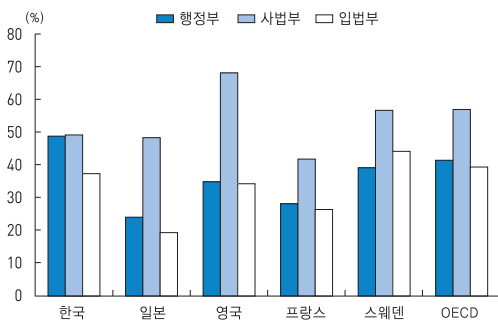
주요 제도와 기관 중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2016년 12.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뒤 2024년 26.0%까지 완만히 상승하였다. 행정부인 정부와 사법부인 법원에 대한 신뢰도 비

슷한 패턴을 보여서 2016년에 각각 24.6%와 29.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탄핵 이후 급상승해서 2021년에 56.0%가 되었다가 2024년에는 44.0%로 낮아진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2016년 이후 완만히 상승하다 2021년 51.2%로 급상승한 뒤 낮아져 2024년에는 46.1%이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는 공공제도가 기관들에 대한 신뢰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2013년 33.6%에서 2017년 31.2%까지 완만히 하락한 대기업에 대한 신뢰 비율은 2020년 들어 크게 상승해서 2022년에 57.6%가 된다. 이후 완만히 낮아져서 2024년에는 55.5%를 보인다.

[그림 XI-16]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것이다. 비교한 자료는 OECD 국제신뢰조사 2021년 자료로 사회통합실태조사와는 그 수치가 다르다.

[그림 XI-16]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국제비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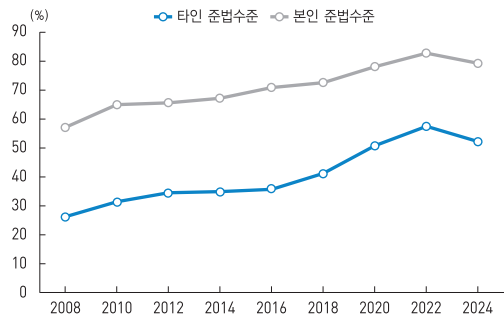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24.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48.8%)는 OECD 평균(41.4%)보다 높고 사법부

(49.1%)와 입법부(37.3%)에 대한 신뢰는 OECD 평균(각각 56.9%, 39.4%)보다 낮다. 한국은 비교 국가들 중에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행정부에 대한 신뢰(24.0%)가 가장 낮았다. 한편 한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일본과 비슷하며, 프랑스보다 높고 영국, 스웨덴보다 낮다. 입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한국은 스웨덴(44.0%)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고, 일본(19.3%)이 가장 낮았다.

[그림 XI-17]은 응답자 본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타인들의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는 2008년 사회조사에 포함된 이후 2022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림 XI-17]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 2008-2024



주: 1) 전체 응답자 중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은 것에 대해 '아주 잘 지킨다' 혹은 '비교적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

2) 2010년 이전 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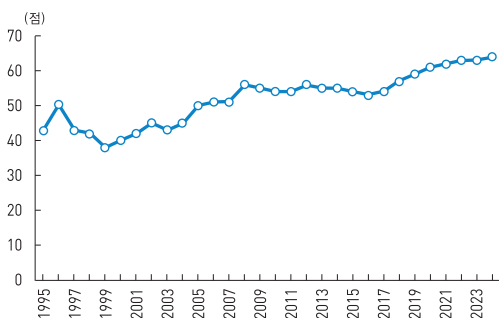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타인의 준법 수준보다는 본인의 준법 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2008년 56.9%에서

2022년 82.6%까지 상승했고, 2024년에는 79.1%로 낮아졌다. 타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도 2008년 26.0%에서 출발해 2022년 57.3%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24년에는 52.0%를 보였다.

시민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들이 법을 지킬 뿐 아니라 권력기관 역시 법을 준수하고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XI-18]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1995년부터 산출해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중 한국의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지수 명칭은 부패인식지수이지만 실제 값은 반대로 표시되어 100점에 가까울수록 투명한 것이다. 해당 값은 전문가 및 기업인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하여 산출한다.

[그림 XI-18] 정부의 투명성 수준, 1995-2024



주: 1) 전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전문가 및 기업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0(매우 부패)~100(매우 투명)점으로 수치화해서 산출한다.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각 연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40점, 2000년에 38점까지 하락한 이후 상승하기 시작

해서 2008년부터 50점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4년에 64점이 되었다. 해마다 비교 국가 수는 바뀌지만 180여 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2016년 52위에서 2024년 3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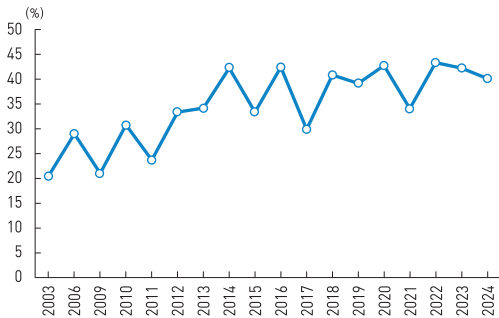
OECD의 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평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며, 감정과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전반적 행복감 등을 포함한다(OECD, 2013).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최근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삶에 대한 평가, 어제 혹은 최근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유데모니아(eudaimonia)이다(OECD, 2013). 또한 측정과 관련해서는 0~10점의 응답 범주를 이용해서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측정이 시작된 것은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부터이다. 하지만 사회조사에서는 2003년부터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 만족도로 5점 척도에 따라 질문하여 측정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만족' 비율과 사회통합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XI-19]를 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03년 20.4%에서 시작해 오르내리며 2010년대 중반 이후 40% 초반까지 올라갔고, 이어 2022년에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뒤 2024년에 40.1%로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2.7%에 불과하고, 보통의 비율이 47.2%임을 고려하면 만족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없다.

[그림 XI-19] 삶에 만족하는 비율, 200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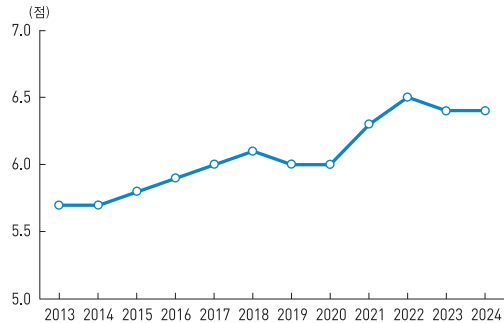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중 주관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묻은 것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약간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I-20]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0~10점 척도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 평균의 변화를 보여 준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2013년 5.7점에서 시작해서 2017년에 6.0점이 된 뒤, 2022년에 6.5점, 2024년에는 6.4점이다. 전반적으로 중간 점수인 5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 동일한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는 없지만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자료를 이용해 매년 발간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이용해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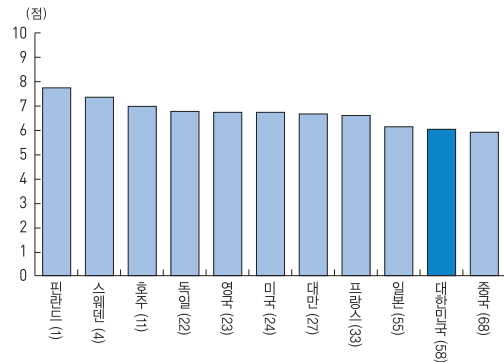
[그림 XI-20] 삶의 만족도 수준, 2013-2024



주: 1) 삶의 만족도를 0~10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치.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1]은 갤럽월드폴에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값의 2021~2023년 평균을 국제 비교한 것이다. 나라 이름 아래에 있는 괄호 안의 숫

[그림 XI-21]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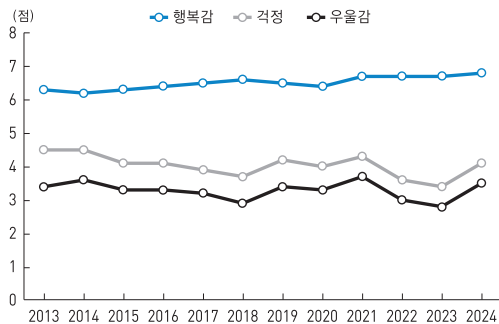


주: 1) Gallup World Poll 삶의 만족도 측정치 2021~2023 평균.
출처: UNSN, World Happiness Report 2025, 2025.

자는 전체 국가 중에서 해당 국가의 순위이다. 한국은 평균이 6.0점으로 전체 147개국 중에서 58위이다. 중간값보다는 높지만 물질적 삶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아쉬운 수준이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핀란드는 7.7점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6.7점으로 독일, 영국,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27위이다. 일본은 6.1점으로 한국과 비슷한 55위이다. 중국은 5.9점으로 68위이다.

[그림 XI-22]는 사회통합실태에서 조사한 부정 정서, 긍정 정서 경험의 변화를 보여준다. 긍정 정서로는 행복감을, 부정 정서로는 걱정과 우울감을 보여준다. 행복감은 2013년 6.3점에서 시작해서 2018년에 6.6점이 되었다가 잠시 낮아진 뒤 2024년 6.8점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림 XI-22] 부정, 긍정 정서 경험, 2013-2024



주: 1) 행복감, 걱정, 우울감을 0~10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치.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한편 부정 정서인 걱정은 2013년 4.5점으로 시작해 오르내리다가 2023년 3.4점까지 낮아지지만 2024년 4.1점으로 다시 상승했다. 우울감 역시 2013년 3.4점에서 시작해 오르내리다 2023년

2.8점까지 하락했지만 2024년 다시 3.5점으로 상승했다.

나가며: 결론 및 함의

한국의 사회통합과 주관적 웰빙은 각각 2000년대와 2010년대 이후에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영역이다. 산업화, 민주화와 세계화, 디지털화 이후 복잡해진 사회적 관계 및 다양해진 사회 갈등과 개인화된 삶이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다.

사회의 복잡화와 다양화 속에서 차별은 줄고 관용은 조금씩 늘지만, 다양한 정체성이 빠르게 섞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사회는 다양성의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심화와 세대 간 격차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힘들게 만든다. 포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개인화되는 삶은 자유의 확대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연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이 줄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은 사회적 연대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민성은 서로 부딪치지 않고 평화롭게 공공선을 지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주요 제도와 기관의 신뢰가 회복



되며, 투명성과 준법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정치적 격변이나 위기에 대응해서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시민성이기 때문

에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재열. 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 『지역사회학』, 5(1), 41-81.
한준, 김석호, 윤건, 이희길. 2017.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개발원.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UNSN, 2025. World Happiness Report 2025. UNSN.